

등급란 확대를 위한 제언



유영관
플무원식품(주) 상무

어렸을 때..... 그 시절에는 계란이 참 귀했지요. 집에서 키우는 닭에서 낳은 계란은 항상 어른들의 상에 올라가는 귀한 반찬이며 식재료였습니다.

그 귀한 대접을 받던 계란이 시설 계사의 도입과 아울러 대형화, 전문화되면서 공급부족이 해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란은 일상적인 식자재로 자리매김 했고 소비자의 인식도 축산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국가도 정책적인 관리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2003년 1월부터 품질등급을 4등급(1, 1, 2, 3), 중량규격 5등급(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나눠 본격적인 등급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의 등급제는 소/돼지고기처럼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선택사항입니다.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도가 낮고 충분한 예산편성도 안 되며, 주말근무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10여년을 훌쩍 넘긴 현 시점에서 계란의 등급 판정량은 총생산량 대비 약 7% 수준으로 지나 온 세월에 비하면 아직 점유율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유율만으로 등급제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 시행초기 열악한 국내 산란계 시장에 필요악이라고 주장했던 등급제가 농장에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확립시켰고, 유통단계를 단순·표준화해 식용란 시장의 확대에 기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도나 규제가 최종 소비자의 요구(품질, 안전, 안심 등)에 부합한다면 과정이 다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란등급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식생활을 지키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중요한 제도이며 현명한 소비자의 구매조건으로써 미래도 밝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등급제를 통해 등급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급제의 효과적인 홍보입니다.

소비자의 구매접점에서 볼 때 구매되는 상품은 대부분 1등급 계란으로 품질 우수성에 대한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란이 판매되는 장소의 유통환경(관리 온도, 포장상태)과 브랜드 유무에 따라 우수성이 확인되는 상황이라 판단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등급판정된 계란의 우수성보다는 회사 브랜드나 기존에 구매했던 경험 그리고 가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란에는 1, 2, 3등급도 있습니다. 1, 1등급의 식용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2, 3등급의 계란도 식용란으로 가능하다는 홍보를 통해 1등급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고 2, 3등급 계란에 대한 소비 방안을 널리 알림으로써 농가의 손실보전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등급별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계란등급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가 상황에 맞고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계란등급제 상황은 부과되는 등급판정비로는 인건비 유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방법으로 등급판정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등급판정량이 늘어나면 비례적으로 평가사의 인원이 늘어날까요? 개인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 등급제의 취지는 살리고 효과적인 통제방법을 구축하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등급제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각 농가와 유통업체는 판매에 필요한 조건으로 등급판정을 선택합니다. 2003년 최초 시행 이후 1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소비자와 유통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기관(학교 급식 포함), 대형 유통마트, 기업 급식에 납품되는 계란은 등급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등급란을 선호하며 사용처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사의 운영문제로 인해 규모가 작고 거리가 먼 곳은 등급판정을 하고 싶어도 지원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품질평가원 조직은 전국 주요지역에 거점을 두고 편재되어 있으며 10여 년 동안 등급판정을 받고 숙달된

농장과 기업이 있습니다. 이젠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품질평가제도를 구체화해 적용시킨다면 추가 인원 배정 없이 판정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품질인증제도와 같이 현장 평가개념에서 관리평가 개념으로 전환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등급판정 범위 확대 권고입니다.

등급판정 계란은 식용란 1등급 계란에 편중되어 있고, 그 외의 등급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가공용으로의 사용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식용란 시장도 중요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언제라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가공용 계란에 등급판정 기준의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용 계란의 품질기준을 식용란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새롭게 정리해 적용시킨다면 등급란의 확대에도 기여될 것이며, 가공용 시장의 2, 3등급 계란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브랜드 계란을 유통시키는 대기업군은 등급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1⁺등급의 계란을 상품화해 출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각 등급별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란등급제를 통해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등급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하는 고객 눈높이로 바라 보며 불합리하고 불편한 제약들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등급제의 범위에 관계되는 관공서, 기업, 농장, 유통업체 등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다면 등급제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육류정책